

2008년

제3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008. 10. 10 (금)

2008년

제3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2008. 10. 10.(금)
- 장소: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대강당
- 주제: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
- 주최: 통일부 통일교육원
- 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

『2008년 제3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
- 일시 : 2008. 10. 10.(금), 14:30~17:00
- 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예지관 대강당

□ 워크숍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30분	○ 등록	교육청
14:30-14:40	10분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씀(통일교육원) ○ 축사(교육청)	▶ 진행 : 통일교육원
14:40-15:25	45분	○ 특강	통일교육원(권영경 교수)
15:25-15:35	10분	○ 휴식	
15:35-17:00	85분	○ 발제 I - 남북관계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발제 II -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 발제 III -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 사회자 - 오기성(경인교대 교수) ▶ 주제발표자(3명) - 이범웅(공주교대 교수) - 김우인(가좌고교 교사) - 최 일(마곡초교 교사) ▶ 토론자(3) - 박윤국(인천시교육청 장학관) - 윤건선(서부교육청 장학사) - 이동준(발산초교 교사)
17:00		○ 폐회	통일교육원

목 차

1. 특강자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7
권 영 경(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2. 발제자료 I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21
이 범 응(공주교육대학교 교수)
3. 토론자료 I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45
박 윤 국(인천광역시 교육청 장학관)
4. 발제자료 II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51
김 우 인(가좌고등학교 교사)
5. 토론자료 II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67
윤 건 선(인천시 서부교육청 장학사)
6. 발제자료 I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탐색 77
최 일(인천마곡초등학교 교사)
7. 토론자료 I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탐색 91
이 동 준(인천발산초등학교 교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권 영 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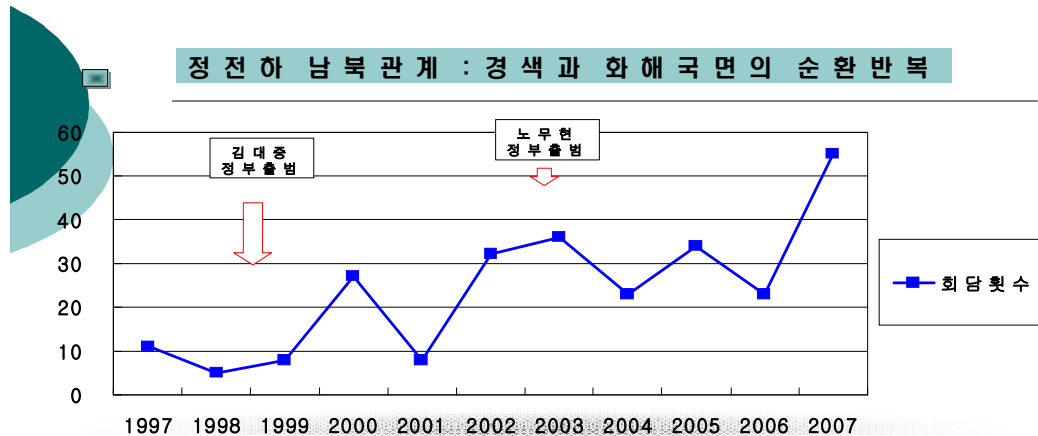
- I. 남북관계의 현황
- I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III. 학교통일교육의 최근 환경과 과제

I. 남북관계의 현황

1. 과도기적 조정기 단계에 있는 남북당국간 관계

- 현재 당국자 차원의 남북관계는 대화단절속에 있지만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정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이 성과도 있었지만,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변화 및 정상국가화 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남겼다는 인식에 따라,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토대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중이었음
 - 그러나 북한은 이 구상을 先 핵폐기, 북한의 개방을 우선시하는 전제조건론으로 규정하고 '반북대결노선'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노골적으로 우리 당국자들을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국자간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
- * 3월 27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협협회사무소의 우리 정부관계자들의 철수 요구를 시작으로, 3월 29일 모든 남북대화의 접촉 중단을 선언하고 당국자들의 북한지역 출입을 금지, 또한 4월 1일부터 대통령을 지명하여 공격·비난하기 시작,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
-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발이 기존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유지와 일부 오해, 그리고 북미관계의 개선 등이 맞물려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실제 매 정권 교체기마다 남북관계는 단기적으로 경색국면을 나타냈었음. 즉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당시에 바로 1년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음에도 경색국면이었고, 김대중정부 또한 출범시부터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99년 내내 경색국면이었음. 그리고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에도 대북송금사건과 맞물려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였음.



○ 금강산관광재 피격사건은 이러한 남북간 ‘과도기적’ 관계 정립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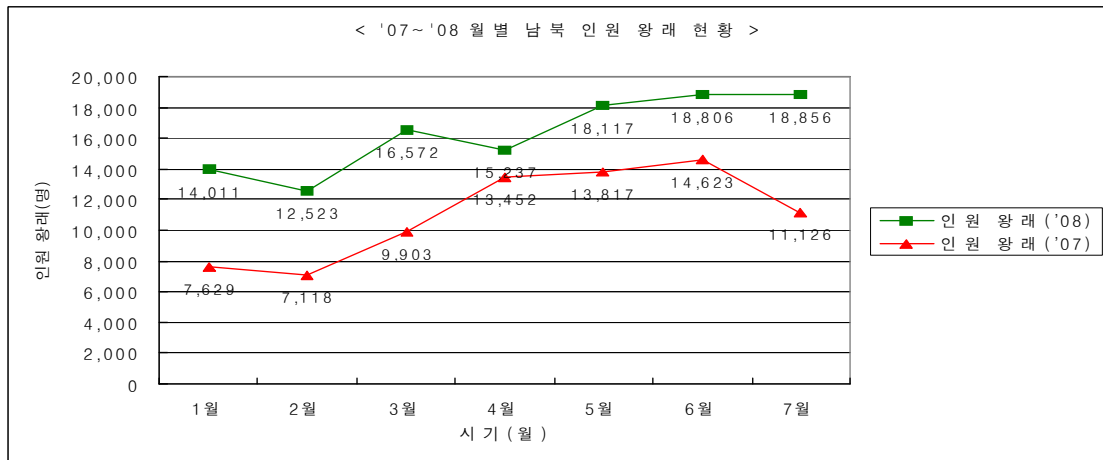
- 이 사건은 그간의 남북관계가 얼마나 불균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정전체제하의 정치군사적 남북관계와 경제·사회적 남북관계의 비대칭성, 정경연계 현실의 남북관계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경제협력간의 비대칭성, 체제대결적 남북관계와 민족내부적 남북관계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발생원인이 무엇이든간에 남북관계가 진정한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대남전략, 혹은 대북전략 차원의 남북관계를 넘어서 통일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려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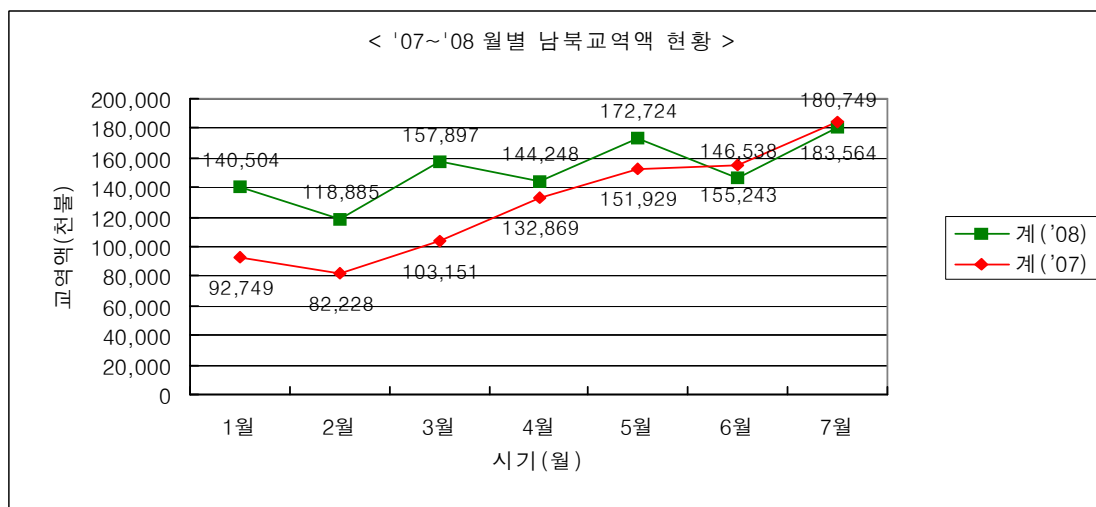
* 북한은 사건 발생 직후 명승지개발지도국 명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그러나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하고, 8월 3일에는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명의로 사건은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금강산지구내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

2. 민간교류협력은 기존 동력하에 지속 증가 추세

- 민간의 교류협력은 당국간 관계의 경색과 상관없이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 세 분야에서 기존의 동력을 유지한 채 지속되거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우선 전반적인 인적 왕래 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7월말까지 남북 인적 왕래는 114,122명(관광객 제외)으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47%가 증가하고 있음



- 남북교역은 금년 7월말까지 10억 6,155만달러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18%가 증가하고, 특히 개성공단사업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생산, 수출액이 16%가 증가함으로써 7월말 현재 전체 교역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 남북관광사업의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이 특히 올해 들어와 최대 호황을 누려서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이 있기까지 199,996명으로서 전년에 비해 43%나 증가하고 있었음. 개성관광은 금강산사건이 있는 후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금년초부터 7월말까지 76,247명이 다녀왔음
- 개성공단사업은 7월말 현재 총 72개 기업(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30개 포함)이 가동중이고, 40개 기업이 공장을 건축중임.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8월말 현재 3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음.(북한 근로자는 2007년 주당 평균 55.7시간 근무하고 월평균 70.2달러의 임금을 받았음) 현재 가동중인 입주기업들은 입주시기에 따라 공장별로 손익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 10여개 기업들은 제품 공정의 일부를 개성시내 북측 기업소·공장에 외주를 주기도. 공단 가동 3년이 되면서 북한 내부 시장 및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
- * 그러나 올 연말쯤 북한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과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가 본격 제기될 우려 있음
-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6.15공동행사 등의 행사와 더불어 북한 체육선수들이 남한에 와서 경기를 하거나 훈련도 하는 교류 등이 올해 진행되고 있었음

< 주요 사회문화교류 추진현황 >

분야	교류 내용
사회 문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남북공동행사(6.15-16, 금강산, 남249 북100 해외77명) ○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2차례 공동학술회의) ○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호 발간 ○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추진(2차례 공동편찬회의 개최)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레슬링대회(3.16-24, 제주, 북한선수단 15명) ○ 아시아유도대회(4.24-28, 제주, 북한선수단 17명) ○ 유소년축구팀 방북(6.14-26, 33명 방북) ○ 남아공월드컵 예선전(6.19-23, 서울, 북한선수단 33명)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봉수교회 헌당예배(7.15-18, 평양, 157명 방북)

- 인도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북한의 대화거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기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지속되고 있음
 - 2007년 한국 JTS,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력기금지원이 44개 사업에 총 117원이었는데, 올해는 40개 사업에 102억 7,500만원의 지원이 결정되어 집행되고 있음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WHO의 말라리아 방역에 12만달러, WHO ·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각기 1,027만달러, 407만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UN인구기금의 금년 10월 북한인구조사사업에 400만달러를 지원하였음
 - 다만 최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상봉사업은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관계의 경색에 맞물려 아직 진행되지 못하였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협력 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즉 경기도가 개성시 및 개풍군에 시행하고 있는 산림녹화를 위한 육묘장 건설사업, 경상남도의 평양 인근 딸기 비닐하우스 종묘사업, 전라북도의 남포시 양돈장 건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남북한 교류협력의 역사는 탈냉전 이후 사실상 18년의 역사를 가짐으로써 과거 냉전적 관계로 되돌릴 수 없는 내재적 동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특히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남북교역이 2007년 37%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자연적 교역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민간단체들이 10년 이상 지속된 인도지원사업을 통해 이제는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개발지원 형태로 진화해나가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추세가 지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임

I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배경

-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래 의도했던 균형 있는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의 의미를 상실하고 지나친 유화정책 appeasement policy)으로 전화함으로써, 국민들간에 ①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고, ② 한미동맹을 남북관계에 종속시키고, ③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④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⑤ 남남갈등을 유발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포용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서 그 접근방식에 따라 유화적 포용정책, 전략적 포용정책, 대파적 포용정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즉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대결적 방법이 아닌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현상변화를 추구하지만, 상대방을 변화로 유인해내는 수단면에서 차이가 있음
- 화해협력정책 10년의 과정은 “대결 일변도의 남북관계”를 “대결속의 교류협력 관계”라는 이중적 관계로 진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개혁·개방으로 유도해내지 못하고 북핵을 수단으로 한 체제생존전략을 변경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에 부딪혔음. 또한 남북교류협력도 지원성 교류협력을 넘어 경제공동체 및 남북관계의 통일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다는 한계에 부딪혔음
-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들을 배경으로, 북핵문제라는 한반도 현안문제도 해결해나감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적극 실천해나가겠다는 의도하에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을 수립한 것임

2.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내용

- 이명박정부 역시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화해와 협력·평화공존·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 따라서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해나가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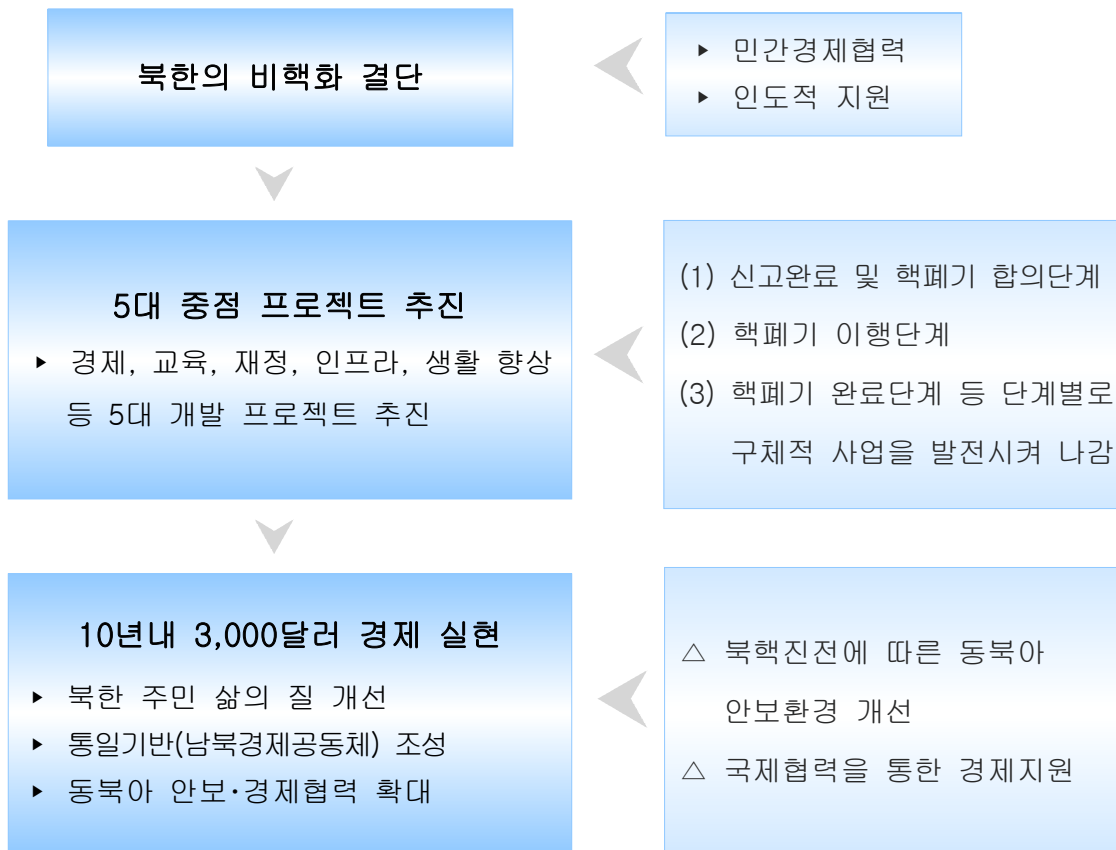
-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를 구축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2)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도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3)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남북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비전은 1) 체제생존전략으로서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불행한 한국전쟁과 체제대결로 인한 남북관계의 특수성(민족내부간 관계+대결관계), 3) 북한의 시대착오적 체제로 인한 정상국가화의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과 국제사회의 협력속에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즉 유화적 포용 일변도로는 추진되기 어려우며 전략적이고도 분명한 원칙하에 추진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1)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용과 생산성의 원칙, 2)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도 유연한 접근, 2) 국민적 합의에 토대를 둔 투명한 정책의 추진, 3) 남북협력과 국제협력과의 조화라는 4가지 정책추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남북경협이 추진에 있어서도 1) 북핵 문제의 진전, 2) 경제적 타당성, 3) 재정부담 능력, 4) 국민적 합의 등 4가지 원칙을 세워 놓고 있음. 한 마디로 전 정부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 및 유화적인 포용정책에 대비되는 **“원칙있는 포용정책”** (principled engagement policy)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기존 정책들이 북한의 교류협력의 확대가 북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의 세 가지 현실들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임. 특히 이전 정부의 '교류협력의 발전 - 평화의 선순환론'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비핵·개방 3000의 구상」을 토대로 한 상생·공영의 비전을 향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음. 이는 다음 도표로 예시할 수 있음.

「비핵·개방·3000 구상」

□ 개념

-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생활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 구상.
- 1인당 소득 3000불은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북한이 적어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추진구도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남북 경제 공동체, 남북 행복 공동체의 미래 구상

5 대 프로젝트	추진 사업
경제	300만 불 이상 수출 기업 100개 이상 육성
교육	30만 산업 인력 양성
재정	400억 불 상당 국제 금융 협력 자금 조성
인프라	에너지 협력, 신경의 고속도로 건설, 철도 도로 항만 정비
주민 생활 향상	절대 빈곤 해소, 병의료원 개선, 산림 녹화 사업, 주택 개선

III. 학교통일교육의 최근 환경과 과제

1. 학교통일교육의 최근 환경

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

- 한반도 평화통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불가결한 통일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이 선택한 체제생존전략으로서의 핵전략은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여전히 존속하게 하고, 북한의 고립화를 가중하여 남북간 긴장관계 및 국력의 격차를 지속시켜 나가게 하기 때문임.
- 현재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2단계 신고 및 검증체계 구축 직전까지 와 있음, 일부 전문가는 부시 행정부내 해결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어렵다고도 전망하고 있음. 전망이 어떠한든 북핵문제는 내년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서다 하더라도 6자회담을 통해 관리되어 나갈 것인데, 완전 폐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시간과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반도에 북핵문제가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는 양적인 발전을 넘어 질적인 발전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우며 그 만큼 남북관계의 이중적 관계도 느린 점진적 과정속에 해소되어 나갈 전망을 갖고 있음.

나. 이미 체제이행의 과정속에 들어가 있는 북한사회

- 북한은 2002년부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를 회복·발전시키고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을 의도하는 실리사회주의 및 ‘북한식 변화’를 추진 중임. 그 결과 경제부문에서의 시장경제 확산이라는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부문에서도 ‘제2의 사회’ 등장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임. 수령 절대체제로서의 정치체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감으로써 주민들의 체제결속력이 약화되고, 심지어 주민생활 측면에서 국가의 시장경제활동 간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행동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 김정일의 건강악화설로 중기적으로 북한 권력구조의 변동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다. 통일 이후를 대비한 주변 강대국들의 새로운 패권경쟁 시작 및 신민족주의 경향의 대두

- 최근 한반도에 예고되고 있는 신질서의 등장은 전통적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보이지 않는 패권경쟁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음.
- 특히 중국이 성공적인 개혁개방 및 올림픽개최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의 ‘화평굴기’를 주창함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입지가 재부상하고 있음. 동아시아는 100년만에 강대국 중국과 일본의 동시 존재라는 현상에 부딪히고 있음

라. 양적인 관계에서 질적인 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한 남북관계

- 남북관계는 10년간의 포용정책으로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그 관계는 여전히 ‘대결속의 교류협력’관계로서, 언제든지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균형관계에 놓여 있음.
- 또한 남북한의 경제력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더 확대되고 그 만큼 통일 이후 예측되는 통일비용의 규모도 더욱 증대되어가고 있는 현실임. 이는

북한이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마. 청소년계층의 개인주의적·경제주의적 성향

- 고도성장의 혜택하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를 기성세대와 달리 당위론적 시각이 아닌, 개인주의적 내지는 이익의 관점에서 고찰함

바.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내 다양한 견해차 존재

- 통일문제가 '실천'의 장으로 접어들면서 세대간·계층간·지역간에 이해관계적 견해차가 더욱 표출하고 있음

2. 학교통일교육의 과제(2008년 통일교육지침서)

-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 나.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존중의 자세 확립
- 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 라.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 마.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 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3. 학교통일교육의 역할

가. 통일미래세대의 적극적 양성

- 향후 통일국가에서 실제로 살아갈 주역은 현재의 청소년 세대이므로 이제는 통일리더십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됨.

나. 통일의 과정에 방관자가 아닌 자기주도적 참여의식 함양

- 분단국에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므로 “내가 만들어간다”는 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다. 통일에 대한 비전의 제시

- 통일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이익의 관점에서 통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과 이익을 주게 되는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통일리더십의 배양

- 통일미래세대들은 한반도 전역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자신의 삶의 무대로 삼게 되므로 한반도를 경영한다는 마인드를 갖게 할 필요가 있음.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이 범 응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이범웅(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I. 서론
- II.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
- III. 남북한 통합 원리의 모색
- IV. 학생들의 통일의식 및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 V. 결론 : 학교통일교육 방향의 정립

I. 서론

1990년대 들어 탈냉전과 함께 국가 간 의존과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남북한 간에는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상호 불신감의 해소를 위한 상호접근이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통일안보교육의 무게 중심이 통일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정상회담과 함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붕괴에 따른 급격한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이 중요시되면서 평화 공존이 강조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 통일교육도 당장의 통일보다는 남북 간의 신뢰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 속에서 평화 공존을 중요시 하게 된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우리는 ‘화해·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러한 화해·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한편으로 이러한 화해·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호응과 함께 통일교육에 기여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일종의 설익은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에 대한 낙관

적인 판단을 토대로 어느 한편으로 경도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개혁에 소극적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곧 변할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에 통일교육은 의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였다. 북한정권의 ‘변화의지’는 회의적이며, ‘변화에 대한 새로운 자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세계사적 추세에 역행하는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¹⁾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도 인정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균형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된 사회는 하나의 국가 속에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분단이전 상황으로의 회귀가 아닌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남북 간의 이질성이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능함으로써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통일의 장애가 산적해 있지만 반세기 동안 형성된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고 견인하며 통일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적 노력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어야 할 주역인 동시에, 통일에 따를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할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건전한 시각과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²⁾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기초한 통일의를 함양시키며, 통일 환경과 과정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습득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³⁾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첫째, 본 논문은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해

1) 조민, “한반도 통일프로세스와 통일비전-통일 왜 지금 말하는가,” 2008평화재단 심포지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08.7.10, p.48.

2) 손기용,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통일연구원 연구 총서 05-10, 2005, p.3.

3)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미발간 논문, 2008, p.2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통일정책을 탐색한 후 바람직한 남북한 통합의 원리를 구안해 볼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실태를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과 그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고찰에 기초하여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의 변화

1. 남북관계의 변화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는 것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남북경제공동체 혹은 남북한 공동변영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 호혜관계를 이룸으로써 보다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평화변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시기에 활성화된 화해협력을 보다 구조화시켜 경제공동체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것은 남북 간 평화증진을 전략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정화시킨다면 평화와 변영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게 되고 이는 햇볕정책으로 본격화된 대북포용이 평화변영정책으로 탄탄하게 구조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⁴⁾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동기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보고 북한과의 평화라는 옳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실현과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변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남북한이 활발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진행하다보면 신뢰가 쌓이고 그 여파가 다음 단계인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접근방식이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내용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거의 개점휴업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

4)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 24권 1호(봄), 통권 60호, 2008, p.18-19.

한 1993년은 1년 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 초기 1998년 역시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북송금특검 등을 둘러싸고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구조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⁵⁾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상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경제·사회관계 중심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동기 없이는 상생과 공영이라는 좋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옳고 그름은 그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남북한이 공히 원인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한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교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는 교환물의 동시성과 등가성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되 철저한 상호주의 또는 조건부 상호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⁶⁾ 노무현 정부는 남북당사자 원칙을 강조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당사자 원칙 대신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병렬 관계로 놓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밝힌 데서 드러나듯이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⁷⁾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루어지는 대북 정책을 간단히 살펴 보았지만 이제 까지 대북정책의 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기 붕괴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점진 변화론이다. 조기 붕괴론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정하고 우리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점진 변화론은 북한체제의 내부동향 분석과 미래 전망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점진변화론은 노태우 정부의 7.7특별선언 발표 이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토대로 기능해 왔다.

점진변화론에 따라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보기보다는 ‘실패중인 국가’로 보는 것

5) 이기동, “대북정책의 창조적 발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한국 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 세계지역학회 주최 2008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속초 마레몬스 호텔, 2008년 8월 21일, p.61.

6) Ibid., pp.64-68.

7) 통일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008.8.7, www.unikorea.go.kr.

이 타당하다. 점진 변화론은 유화정책 및 대북 포용정책으로 나타난다. 이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거부하면서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핵포기를 유도하고, 대화단절을 우려해 북측이 꺼려하는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반면에 조기 붕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이다. 봉쇄정책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비경쟁을 통한 체제우위를 강조하며 북한 정권의 종식에 목표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대북 정책은 아래의 <표Ⅱ-1>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Ⅱ-1>대북정책의 두 가지 인식과 접근법

정세인식	조기붕괴론	점진변화론
정책목표	자유민주통일(정권타도)	평화공존(정상국가화, 평화체제)
정책기조	맞춤형 봉쇄	원칙 있는 포용
접근법	연계론	병행론

그동안 남한의 대북 정책은 정권의 변화 함께 조기붕괴론과 점진 변화론을 넘나드는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는 조기 붕괴론에 치중하였고, 노태우 정권부터 점진 변화론으로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역대 정부가 완전한 조기 붕괴론과 완전한 점진 변화론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된 대북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회유와 압박을 균형 있게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8)

무엇보다도 북한 자체의 진지한 변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 며칠 전 경제부문 책임일꾼 회의에서 그는 극도로 흥분했다고 한다. 선박공업부장(장관급)을 일으켜 세워 “몇 해 전 대형 짐배(화물선) 100척을 짓겠다고 하더니만 지금 해놓은 게 왜 아무것도 없느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북핵 문제가 다시 꼬여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남북문제도 최악으로 치달아 식량 조달도 힘들어졌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 현금도 돈줄이 말라버리는 등 김 위원장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9) 이렇게 호통을 치거나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도, 전지전능의 힘으로 현지도도를 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도

8) 조성렬, “토론문: 북한 정세의 인식과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2008평화재단 심포지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08.7.10,p.66-69.

9) 중앙일보, 08.9.12

아니다. 이제 북한 당국이 어렵지만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인민과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이다.

2. 통일 환경의 변화

그동안 통일에 접근이 정권의 당파심과 공명심에서 좌지우지된 측면이 있어왔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지난 20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바탕 위에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민족통일대계”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10년 정도 이어져온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 ‘통일정책’이 아닌, 북한을 관리하고 남북관계의 현상적 측면만을 강조해 온 ‘대북정책’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통일보다는 남북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수렴론에 입각하고 있다. 60년의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통일정책을 모색할 때가 왔다. 북한을 관리하고 남북관계의 안정만을 희구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능주의적 통일 방식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막연한 기대감에 바탕을 두었다.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은 아니지만, 분명 과거와 차별되는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호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되어야만 대규모의 남북경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이다.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특수성과 예외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 남북관계에 접근하였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믿고 있다.¹⁰⁾

‘이념과잉’과 ‘민족과잉’에서 벗어나 한미공조, 국익, 외교적 보편성 위에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경협 추진 4원칙으로 제시한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 등은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따라서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맞

10) 남북경제협력을 한 부처가 하기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북관계가 꼬일 때는 북한에 매달리기 보다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11) 「동아일보」, 2008.2.1.

게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인권개선과 인도주의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경협도 보편적 원리인 경제논리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상생공영정책이라고 명명하였다.

상생공영정책에 대해 북한은 지난 8월 4일자 조선신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통일부의 6.15청년학생본부와 민주노동당 등 8월 남북 교류사업 및 정당교류를 만류한 데 대해 민간교류 허용을 촉구하며, “결국 ‘상생, 공영’ 정책이라는 것은 허울뿐이고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정책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불만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북한이 과거 수년간 누렸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익의 상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남 차원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 내 갈등을 부추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대내 차원에서 북한은 내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원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은 한반도의 급격한 상황변화 및 통일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변환과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 및 전략적 유연성 등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의 변화된 국제적 안보환경은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면서 북미간의 관계 경색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한반도 통일 환경에 부정적 역량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 선호의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대한반도 정책 공조에 치중하는 한편, 대북 직접교섭의 가능성도 간헐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극동지역 지하자원개발 등 남한과의 경협확대 노력과 과거 구소련 시절의 대북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대북외교를 병행하는 등 대한반도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선 유사시에 대비해 영향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우리는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며,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한·미 공조의 강화가 북한을 고립·압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북한

12) 박종철, “대북포용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의 비교: 도전과 전략적 선택,”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통일연구원 건국60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 2008.7.17), p.22.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남한 내에서 우선 자유공간과 국민 복지의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상생 · 공영을 이루기 위해 통일 주체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거버넌스가 민간부문의 형식적 참여를 통해 이른바 ‘구색 맞추기’ 식이었다면, 이제는 정책과정 전반에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종전과 같이 단순히 민간의 참여만을 보장하는 형식적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¹³⁾ 그러한 노력이 쌓여 통일의 길이 열리고 더 적은 통일 후유증을 갖게 될 것이다.

대북인식에서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가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진행 중인 ‘건국 60주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8차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백진현 교수는 “대북관계를 보는 냉전 패러다임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체제 경쟁적 관점뿐 아니라 남북한 양측 체제를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냉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다. 1970년대 냉전이 고착화돼 바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뿌리를 둔 시각이란 지적이다. 백 교수는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식의 ‘현상 유지적’ 발상이 아니라 북한이 개방화 · 자유화 · 세계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현상 타파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¹⁴⁾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유, 다양성 존중, 인간 존중, 개방적 사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것에 크게 위배되어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는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남북한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균형회복의 문제는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북한체제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기가 무척 힘들다.¹⁵⁾ 따라서 북한의 개혁 · 개방 과정이나 경직된 체제의 고수 과정에서 ‘통일모멘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통일은 점진적 · 단계적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의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도 상존한다. 남북연합이든 연방제든 과도기적 통합 형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3) 최진욱, 강동완, 최진욱, 강동완,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발전방향 :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모색,” 한국 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 세계지역학회 주최 2008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속초 마레몬스 호텔, 2008.8. 21, pp.51-53.

14) “북한 개방 · 세계화에 동참하도록 해야,” 중앙일보, 08.9.11.

15) 조민, op.cit., p.47.

Ⅲ. 남북한 통합 원리의 모색

남북사회의 객관적 이해와 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동질성의 회복이 없이 통합되면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통합은 동화와 달리 자기 문화의 핵심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중요한 면도 받아들이는 적응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알려진 홉스적 야만 상태를 넘어선 공생적 사회질서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¹⁶⁾ 에치오니(A. Etzioni)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세 가지 힘(power)’을 제시하였다. 첫째, ‘명분의 힘’ 또는 ‘규범의 힘’이다. 둘째, ‘실용적 힘’ 또는 ‘경제적 힘’이다. 셋째, ‘강압적 힘’이다. 이 세 가지 힘을 활용한 통합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명분의 힘’을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며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채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이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김일성은 소련의 괴뢰이면서 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다’에서 찾았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실용적 힘’ 또는 ‘경제적 힘’의 발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하자원이 풍부했고 일제의 공업시설이 비록 손상된 형태이나마 대부분 잔존했던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하자원이 부족했고 대부분이 농업지대였던 남한에서 신생국가의 정부가 ‘실용적 힘’ 또는 ‘경제적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모두 남농북공의 발상 위에서, 남북상호보완주의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농업국가인 남한은 단독으로는 생존이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장차 공업지역인 북한을 흡수 통일함으로써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남북협상론자들 역시 남한은 단독으로는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러한 믿음에서 그들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시했던 것이다.¹⁷⁾

셋째, ‘강압적 힘’의 극단적 표현은 군사력의 동원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강압적’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폭압적’이라거나 ‘불법적’이라는 나쁜 뜻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권력이 똑바로 서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치안의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강압적 힘’을 행사하고 있음이 그 점을 말해준다. 남한 정부는 이렇다 할 힘을 갖지 못한 채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

16) 함인희, “세대분화와 세대 충돌의 현주소,” 한국 여성개발원,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공동 주관 학술대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6.10.19, p.160.

17) 김학준, “건국 60주년 한국 현대사의 성찰과 한민족의 미래-미래를 향한 교훈의 추출을 위한 하나의 시도-,” 2008평화재단 심포지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08.7.10, pp19-20.

고 UN군의 도움으로 북에 의한 통일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동안 힘에 의한 통일을 막기 위한 군비경쟁에 남북한은 서로 매진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남한 내의 좌익과 우익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행사는 서로의 명예가 되었다. 남북한 모두는 남북대북대결주의를 지향했다. 남북대결주의 아래 남북의 ‘강압적 힘’은 크게 강화됐으며 동시에 남용됐다.

통합의 셋중 가장 원천적인 힘은 명분이나 규범적 우위로부터 나온다. 구서독은 우선 대내적으로 자신을 민주공동체와 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자석(磁石) 이론’에 입각해 독일연방공화국이 힘 있는 커다란 자석으로 성장해 강력한 자력을 발휘함으로써 광범위한 자장(磁場)을 형성하는 매력적인 국가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신을 서방세계의 일원으로서 서구민주주의국가들과 더불어 유럽을 하나의 협력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었다.¹⁸⁾ 이처럼 ‘명분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보수주의자이건 진보주의자이건 간에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명분의 힘’을 내세우는 데 한계를 만나게 된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통합의 대원칙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지난(至難)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간 명분의 싸움에서 흑자는 북한의 우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근거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 친일파의 제거, 평등사회의 실현 등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지도자나 당국은 명분이나 도덕에서 우위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은 북한의 명분이나 도덕성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인민을 굶주림과 도탄에 빠트렸고 최악의 인권유린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자유의 실종과 37개월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가 처한 복합적이고도 다면적인 문제들, 그 역사적 조건과 변화하는 상황을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통일을 책임 있게 준비하는 지적, 정치적 예지를 갖출 때 비로소 ‘명분의 힘’이 형성될 것이다. 명분의 힘을 비축하기 위해 이제 규범적 종합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과 당국자들이 규범종합으로부터 생겨나는 공통된 양식들을 더 많이 수용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대결적 태세로부터 협력적 공동체로 옮겨갈 수 있다.¹⁹⁾ 따라서 규범

18) Ibid.,p.24.

19) 아미타이 에치오니 저, 조한승 외 공역, 「제국에서 공동체로-국제관계의 새로운 접근-」(서울: 도서출판 매봉, 2007), pp.125-127.

적 종합은 양극단의 접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규범적 종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도덕적 대화는 종종 혼란스럽기 짝이 없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종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북한의 집단주의와 남한의 개인주의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통합과 조화의 원리는 에치오니가 주장한 “통합내의 다원성 (diversity within unity)” 접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접근은 동화와 무제한의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화는 주류문화에 편입시키기 위해 소수인들(민족)에게 자신의 독특한 제도, 문화, 가치, 습관(관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동화는 사회학적으로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의 명령을 되살리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동화 정책은 비민주적 반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무제한의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특권화하기 위해 공유의 가치, 충성, 정체성의 개념을 포기하고, 국가는 다양한 소수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반면에 “통합 내의 다양성”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기본적인 틀로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제도를 충실히 존중하는 것을 전제한다. 동시에 사회내의 모든 집단들은 그 사회의 공유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하부의 가치들(정책, 습관, 제도들)을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인간에 대한 존중,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 등은 우리의 핵심적인 자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합 내에서 다양성”은 사회와 그 사회의 문화를 위협하기 보다는 오히려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양성에 대한 합법적인 인정과 지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견고한 통합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냐의 문제 일 것이다.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국 교포들이 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합 내의 다양성”을 적용할 때 규범적 종합을 통해 통합의 가치를 모색하고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남북한의 민·관간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추진되는 거버넌스(governance)²⁰⁾ 형태로 성공리에 진전된다면 “통합내의 다원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다. 통일운동도 국가중심 하향식에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통합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을 시론적으로 모색해보자 한다.

20) 거버넌스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중심의 통치능력이 약화되고 통치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중심의 통치를 대체하는 인식 틀로 수년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거버넌스적 현상의 6가지 지표들로 참여성, 전문성, 자율성, 분권화, 네트워크, 효과와 효율성 등이 있다.

IV. 학생들의 통일의식 및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1. 학생들의 통일의식

아래 <표IV-1>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조사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거의 과반수가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1>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²¹⁾(단위%)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아주 관심	조금 관심	별로 무관심	전혀 무관심
[국정홍보처 2005]	58.8		41.2	
	5.7	53.1	34.9	6.3
[통일연구원 2004]	42.6		57.4	
	7.1	35.5	45.2	12.2
성인들의 평가	24.5		75.5	
[통일연구원 2005a]	5.5	19	55	20.5

<표IV-2>청소년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²²⁾ (단위 %)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66.1		33.9	
	13.0	53.1	27.5	6.4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	58.2		47.1	
	11.4	46.8	34.7	7.0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50.1		49.9	
	9.2	40.9	43.9	6.0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	54.6		45.4	
	11.8	42.8	36.8	8.6

2004년 통일교육원의 의뢰에 의해 방송문화연구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²³⁾,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

21) 손기웅,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통일연구원 연구 총서 05-10, 2005, p.12.

22)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68에서 재편집

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응답이 37.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0.8%,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2.6%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 50.4%, 인터넷이 16.7%로, 교과서 및 기타 서적이 1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종전의 조사 결과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2006년 손기웅의 “학교통일교육 현황과 개선방안”²⁴⁾ 연구 결과는 보다 충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며, 통일문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현재의 수업 방식은 강의식교육(47.1%), 시청각교육(27.6%), 토론식교육(12.7%), 현장학습중심교육(3.4%)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으며, 희망하는 수업방식으로는 현장학습중심(42.7%)이 가장 높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반이 청소년의 통일관심 제고 방안으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통일교육의 의미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2.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승공통일교육→안보교육의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적 체계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대체로 1980년대 후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안보교육의 형태를 띠면서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동시에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이로써 통일과 안보는 대등한 위치에서 강조되게 된다. 반면 1990년대 말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간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 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종전에 비해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평화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23)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 (2004).

24) 손기웅,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차 청년위원회 결과보고 (2006. 6), p.4.

이러한 통일 환경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화해·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은 남북 간에 분단 이후 누적되어온 상대방에 대한 대결심리와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로서 평화와 화해·협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이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주민간의 평화에 기초하여 화해·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지향하게 된다. 즉 남북한 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사회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의 확립을 기초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확립시키고자 하였다.

화해·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은 노무현 정부시기에 평화에 더 큰 강조점을 부여하는 통일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2007년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적 측면에 상당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통일부의 2007년 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보면, 기본 추진 방향의 제1항이 ‘평화공존 시대를 여는 평화교육의 강조’로 제시되고 있으며, 중점 추진 과제의 첫 항도 ‘남북협력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평화교육의 제도화 추진’으로 제시하고 있다.²⁶⁾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평화교육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교재에 평화교육의 반영, 우리 사회내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 교육과정(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적 요소가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이렇듯 학교 통일교육에서 화해·평화 지향적 접근은 통일문제를 학습자의 삶의 세계로 끌어들이겠다는 점, 통일을 과정으로 보려 한다는 점, 통일 준비 차원에서 일상에서의 평화와, 통일 이후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문제의식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통일문제를 남북 간, 즉 민족 간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대북지원이나 경협이 북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점, 안보보다는 지나치게 화해협력을 강조했다는 점, 지나친 긍정적 북한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간된 학교 통일교육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에 대한 강조가 감소되고 오히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

25) 한만길 외,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4.

26) 통일부, 『2007년 통일교육 기본 계획』 (2007), pp.7-8.

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여러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역량이 갖추어질 때만 통일의 노력이 생산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안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소항목이 추가로 진술되고 있다.²⁷⁾ 다른 한편 이러한 변화는 화해·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이 안보 문제에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이며, 군사적 안보의 대상이라는 북한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다음에서는 최근의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IV-3>, <표IV-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발전된 측면을 보여준다. 원래 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경우에는 6차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30%정도 축소되었다. <표IV-4>에서 보듯이 중학교 도덕과를 예로 볼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도덕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은 이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중·고등학교(8-10학년)의 도덕을 1학년에 2개 영역씩 학습하도록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이 2학년에서만 다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놓고 보면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하여 통일교육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또한, 이전의 통일교육과 달리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실상에 관련된 부분이 제외되었다.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시켰다. 이것은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은 너무 동태적인 특성이 많아 교과서에서 다루기도 힘들고, 또한 사실적 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타교과를 통해서도 가능한 내용이라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이다.

2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학교 통일교육지침서 (2008)』, p.9, 50 참조.

28) 아울러 현행 학교 통일교육지침서는 관점을 제시하는 ‘지침’이라기보다는 통일문제 관련 사실, 역사 등을 나열함으로써 교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 및 통일관련 이슈나 갈등적 주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장에서 활용도 또한 낮은 편이다. 심지어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교육 지침서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¹⁾ 아울러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사실, 역사를 나열함으로써 현재 통일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통일백서」, 「통일문답」 등과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기성, “학교통일교육 지침의 개선 방향 연구, 『학교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07), p.84 참조.

<표Ⅳ-3>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초등학교)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바른 생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애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 가지기 ·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 바르게 달기 ·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 긍지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 해외 동포들의 생활에 관심 가지기 ·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 사랑하기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소중히 하기 ○ 통일에 대하여 관심가지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극복의 의지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하기 ·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기 ·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문화 유산 애호 ·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긍지 ○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 평화 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 가지기 · 다가올 통일에 대비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 극복과 관용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 평화로운 세상 	

<표Ⅳ-4>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중고등학교)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민족의 의미 파악 ·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 · 국가,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없음)	<p><나의 삶과 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 국가 발전과 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 과제 · 통일의 필요성 · 북한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현실 ·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 남북통일과 통일실현의지 	<p><통일과 민족공동체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주민과 민족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체 번영과 통일국가의 실현방안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길 	(없음)	<p><세계평화와 인류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고등학교	전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p><국가와 민족의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윤리 ○ 민족과 윤리

반면 <표IV-5>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의 주체적 성찰 및 실천을 강조하였고 범위적 특성을 삭제하고 전학년에서 전 영역을 다루었다. 개정 교육과정은 종전의 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동안 통일관련 내용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 평화, 인권,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통일 준비의 측면과 통일 이후 대비의 측면에서 민주시민성, 평화, 인권의 소중함과 아울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은 ‘편견의 극복과 관용’,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대화와 갈등 해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의 중요성을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평화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학교 1-3학년 동안 통일문제를 직접, 간접적으로 다루어줌으로써 일정 정도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에서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의 이해’, 중학교 2학년의 ‘북한 주민과 민족애’라는 내용 요소만을 통해 과연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²⁹⁾

<표IV-5>2007년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중 통일관련 내용

주요 가치 덕목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영역	영역				
민주적 대화 애국· 애족 평화· 통일	나라·민족 · 지구공동 체와의 관계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분단의 배경 과 민족의 아 픔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공지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 의 통일노력	○북한 동포 및 세 터민의 삶 이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편견 극복과 관 용 ○우리가 추구하 는 통일의 모습 ○평화로운 세상
	국가·민족 · 지구공동 체와의 관계	학년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나의 삶과 국 가> ○바람직한 국가 의 모습 ○국가 발전과 나	<통일과 민족공동체운 리>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주민과 민족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세계평화와 인류 애> ○타문화에 대한 편 견 극복 ○세계 평화와 인류 애의 실현	<국가와 민족의 윤리> ○국가와 윤리 ○민족과 윤리

※진하게 밑줄 치리던 내용 요소는 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며, 그렇지 않은 내용 요소는 통일교육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임

다음으로 기존의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가르치기보다는 통일정책이나 이념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추종자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이 남북 간의 차이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차이를 더 심화시켰다

29)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미발간 논문, 2008, p.5-7.

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학교통일교육이 개념의 불분명, 방향설정의 미흡, 자료 부족,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족 등으로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 설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간의 교사양성 대학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교원을 양성하지 못하였다.³⁰⁾

그러므로 학교통일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사 자신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예비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다.³¹⁾ 그리고 통일교육을 잘못하면 교사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피해의식이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을 자율적으로 꾸릴 수 있는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³²⁾ 수능 시험의 경우도 통일 관련 문제를 낼 경우 진보와 보수 진영의 다른 시각을 수렴할 수 있는 문제를 내기란 어렵고 출제진에서도 후과가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의 첨예한 이념적 대립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관용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V. 결론: 학교 통일교육 방향의 정립

한국의 N세대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자라난 세대로서 가상공간 하에 수많은 공동체를 구축하고, 강한 독립심과 자율성을 보이며 자기표현에 적극적이고, 익명성을 이용하여 거침없이 감정표현을 하며 디지털 기술에 강한 호기심을 보인다. 더불어 이들은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로서 과잉교육열의 수혜자이자 피해자로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으로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 행동유형을 보이고 있다.³³⁾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교사들은 깊이 인식한 상태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특별히 분단국내에서만 존재하는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분단국가를 통일시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통일대비교육”인 동시에 “통일 이후(흡수통일이나 합의통일의 경우 기존 교육대상에 속하지 않

30)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아주 적으므로 관련 내용을 소개받을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1) 화해 협력 시대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민주평통자문회의 제 1차 교육전문 위원 보고자료, 2008. 9. 20, p.11.

32) Ibid., pp.8-9.

33) 함인희, “세대분화와 세대 충돌의 현주소,” 한국 여성개발원,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공동 주관 학술대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6.10.19, p.122.

있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통일완수교육”이기도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 상황에서 수립되어 통일과정을 주도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체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완성을 지향한다.³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앞에서 살펴본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방안을 구안해보고자 한다.

1. 통일문제의 주체화

학생들의 특성은 통일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설명되지 않고서는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통일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큰 이야기로, 나의 일상과는 무관한 정치적 차원의 이야기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이 과제를 일상에 위치 짓고 통일의 문제를 ‘일상’에서 체감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곧바로 통일, 분단, 북한을 논의하기 보다는 학습자들의 생활과 관련짓고 이를 기초로 해당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이 자신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통일교육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이어지는 통일교육내용의 전달이나 학습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학생들에게 개별화, 주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체험학습 기회의 확충

북한사회를 바로 아는 것도 통일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대중매체에서 북한의 현실을 보도·방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사회를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북한 사람과의 만남이다.³⁵⁾ 그러므로 현장 견학, 북한청소년 및 탈북청소년과의 교류와 접촉과 같은 체험, 경험학습 위주의 교육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³⁶⁾ 과거 서독의 사회체제를 체험할 계기를 가졌던 동독의 청소년들이 훗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중심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단국간 청소년 교류가 함축할 수 있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한다. 북한지역 견학 등의 현장교육활성화와 남북 청소년교류, 탈북주민·청소년과의 교류 등이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산교육이 될 것이다.

34) 정용길, “동서독 정치교육의 비교,” 분단국 통일론 (서울: 고려원, 1989), pp. 86, 90~91.

35) 손기웅,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통일연구원 연구 총서 05-10, 2005, p.66.

36) Ibid., p.27.

3. 통일 문화적 접근

통일교육이 단순히 인지적 영역에서 지식을 암기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체험해 가는 “통일 문화적 접근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³⁷⁾ 통일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문화라 하면 첫째,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에서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 양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 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통일문화의 개념은 결국 통일국가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해소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교범 및 그 실천정책의 장출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³⁸⁾ 통일문화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통합의 가치가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4. 사실교육에서 가치교육으로

통일교육에 있어 북한 이해는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에 입각하여 북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가운데 과도기적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판단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통일사회를 일구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사실교육에서 점차적으로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 창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가치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5. 통일 이후의 진정한 준비교육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통일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변화는 적응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37) Ibid.,p.68.

38) 길은배,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pp.13~20.

겪을 것이고, 결국 적응이 안 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통일 후 우리가 겪게 될 주요 심리적 문제들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의 적응 및 부적응 실태를 기초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터민들의 남한생활은 앞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었을 때 서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남북한 사회통합의 효과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소규모 예비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³⁹⁾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의 목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통일사회의 삶에 있어 추구해야 할 도덕성이다. 따라서 제도적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덕과 통일교육의 고유한 내용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독일은 한 번도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 가고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을 꾸준히 하였다.

6. 분단 및 통일문제 관련 정의적 측면의 강조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인지와 행동을 매개해 주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정의적 측면 즉, 통일을 학습자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소망하는 마음을 기초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일문제는 초중등학생 공히 마음으로 느끼고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의 상호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에 신뢰, 배려, 협력과 같은 감성적 덕목, 이 외에 교감(appreciation), 공감(empathy), 헌신(compassion) 등의 덕목도 아주 중요하다.

7. 균형적 시각의 교육

화해·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지나친 긍정적 북한관에서 벗어나 국방위원장 중심의 당-국가체제, 비민주적인 유일지배체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제적 어려움, 문화예술의 정치 시녀화, 왜곡된 사실의 교육,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것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보편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되, 이것이 통일의 과정 속에서 극복

39) 조정아,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 생활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공동 주관 학술대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6.10.19, p.163.

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점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통일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여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교육과 언젠가 같이 살아갈 동반자로서 하나로 느끼는 교육이 균형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과거 기성세대가 배운 대로 통일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명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탐구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박 윤 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남북관계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모색”에 대한 토론편

박윤국(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발표자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방향도 화해·평화 지향적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통일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긍정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강점과 함께 지나친 낙관적 통일관을 심어주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발표자는 화해·평화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긍정적 측면으로 통일문제가 학습자의 삶의 세계로 들어와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통일을 과정으로 보려 한다는 것, 통일준비 차원에서의 평화와, 통일 이후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부정적 측면으로는 통일문제를 민족간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대북지원이나 경협이 북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것, 안보보다는 지나치게 화해협력을 강조했다라는 것, 지나친 긍정적 북한관으로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발표자는 기존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가르치기보다는 통일정책이나 이념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추종자로 만들었다는 것, 민족공동체 회복을 가르치기보다는 남북간의 차이를 더 심화시켰다는 것과 함께 학교통일교육 개념의 불분명, 방향설정의 미흡, 자료 부족, 교원에 대한 연수 기회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발표자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발표자의 발제 내용 중에서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교통일교육 담당교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발표자의 주장 중 몇 가지에 대한 발표자의 좀 더 자세한 생각을 듣고자 한다.

1. 통일교육의 현장 체험 학습 가능성에 대한 문제

발표자는 “북한사회를 바로 아는 것도 통일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대중매체에서 북한의 현실을 보도·방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사회를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북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그러므로 현장 견학, 북한청소년 및 탈북청소년과의 교류와 접촉과 같은 체험, 경험학습 위주의 교육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북한 지역의 여행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체험, 경험 학습이 어떻게 가능한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 속에서 체험, 경험 학습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2. 점진적 변화론과 조기 붕괴론 중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조기 붕괴론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정하고 우리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점진 변화론은 북한체제의 내부동향 분석과 미래 전망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점진 변화론은 유화정책 및 대북 포용정책으로 나타난다. 이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거부하면서도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핵포기를 유도하고, 대화단절을 우려해 북측이 꺼려하는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반면에 조기 붕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이다. 봉쇄정책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비경쟁을 통한 체제우위를 강조하며 북한 정권의 종식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처한 현실과 남북관계의 상황,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등을 고려할 때 조기붕괴론과 점진 변화론 중에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발표자는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3. 남북한의 거버넌스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의 가능성

이전 정부가 추진한 거버넌스가 민간부문의 형식적 참여를 통해 이른바 ‘구색 맞추기’ 식이었다면, 이제는 정책과정 전반에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종전과 같이 단순히 민간의 참여만을 보장하는 형식적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본 토론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남한에는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파트너로서 북한의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한의 거버넌스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북한 거버넌스간 교류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4.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김일성은 “미국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제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김정일은 “나에게서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말한 내용을 발표자는 소개하면서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 지도층의 인식을 고려할 때 북한의 획기적 변화를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고 예상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북한의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북한의 변화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주기를 부탁한다.

5. 규범적 종합의 방법

에치오니(A. Etzioni)의 주장을 빌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세 가지 힘(power)’을 발표자는 제시하였다. 첫째, ‘명분의 힘’ 또는 ‘규범의 힘’이다. 둘째, ‘실용적 힘’ 또는 ‘경제적 힘’이다. 셋째, ‘강압적 힘’이다. 이 중 통합의 가장 강력한 힘은 ‘명분의 힘’과 규범의 힘으로 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명분의 힘을 비축하기 위해 이제 규범적 종합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과 당국자들이 규범종합으로부터 생겨나는 공통된 양식들을 더 많이 수용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대결적 태세로부터 협력적 공동체로 옮겨갈 수 있다고 발표자는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규범적 종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여기서 남북한 공동체 라는 표현에서 국가와 공동체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한다.

6. 교사의 통일교육에 대한 열의 부족

발표자는 학교통일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사 자신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예비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였다. 왜 특히 통일교육 담당 교사에게 다른 교과 담당자들과 달리 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통일교육관련 교사의 사명감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문고 싶다.

7. 사실교육에서 가치교육으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사실교육에서 점차적으로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 창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가치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사실교육에 담아야 할 내용과 가치교육에 담아야 할 내용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8. 통일교육 관련 정의적 요소가 중요한 이유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인지와 행동을 매개해 주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정의적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왜 통일교육에서 정의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학교 통일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을 교육시킬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말해주었으면 한다.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김 우 인
가좌고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김우인(가좌고등학교)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학교통일교육의 진단
- IV.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 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최근 중·고교 학생들의 거의 과반수가 통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2005)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일의 방식, 시기, 통일 후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대해 중·고교 학생들의 58.8%가 관심이 없다고 했고, 통일연구원(2004)의 설문에서는 57.4%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중·고교 학생들이 과반수가 넘게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통일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다. 문명사적으로는 정보화·세계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국제적으로는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김동근, 2005), 국내적으로는 2000년 6·15공동 선언, 2007년 10.4선언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학교통일교육의 대상인 학생들도 변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사이버 세계에서 가상체험을 하고, 디지털 오락기기로 지구촌 여기저기를 놀이터 삼아 누비며 자라온 디지털세대이다. 이들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조의 훈화 대신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느낌을 중시하는 뉴에이지 문화에 길들여진 세대이다. 이들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남의 눈치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충실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거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거부하며, 좋아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디지털세대를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21세기를 단순한 세기적 변화로만 인식하지 않고 정보화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를 특징으로 하는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규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기치아래 ‘수요자 중심 교육’을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7차 교육과정부터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왔다.

학교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범교과 통일교육, 교과 외 다양한 통일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경호, 2005 ; 김동근, 2005 ; 김명, 2003 ; 박준수·추병완·백장현, 2003 ; 안승대, 2006 ; 오기성, 2001).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어서 학생 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교육을 ‘수요자 중심 교육’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가정하고, 이들의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교통일교육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진행되어 온 교육 개혁 방안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혁 논리가 바로 ‘수요자 중심 교육’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의 논리는 유럽과 북미 등 여러 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그 개념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한 채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킨다는 소위, ‘자유 시장’적 수요자 중심 교육을 표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시장적 수요자 중심 교육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공교육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이나 대학과는 달리 자유경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자는 자유시장적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개념 대신 ‘복지 지향’적 수요자 중심 교육(이하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복지 지향적 수요자 중심교육이란 교육자가

교육수요자의 주문에 무조건 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육을 받는 대상의 실제 능력과 잠재적 가능성을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필요(needs)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학생만족'과 '학업성취'를 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는 과거에 교사, 학교 중심의 '지식전수'만이 아니고, 학생 중심의 '자아실현'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2. 학생만족, 학업성취도

학생만족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과(outcome)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process)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는 학생만족을 학습 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유재(1994)는 '불일치된 기대와 소비자가 소비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적 심리상태'라고 정의 하였다. 반면 후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학생만족을 학습과정에서 '경험이 최소한 기대되었던 것보다는 좋았다는 평가'(Hunt, 1977)나 "선택된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적 신념과 일치되었다는 평가" 혹은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성과 사이의 차이에 대해 보이는 소비자의 반응"(Tse & Wilton, 1988)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들은 모두 학생만족의 근거에는 평가과정이 중요한 요소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만족을 전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도'(채연수, 1999; 황인호, 2005), 즉 학생이 기대된 서비스 정도에 감정적, 주관적으로 지각된 만족의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정의한다.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 지적능력, 태도 가치관 등 학습결과물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학업성취에는 지적영역의 학습결과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도 포함된다. 학업성취의 의미가 이와 같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가정과 학습을 위한 공간인 학교 그리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에 따라 학업성취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업성취는 학교만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사회의 긴밀한 연결체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가 그러한 모든 조건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도출해 내는가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곽수란, 2003). 학업성취도와 학생만족도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학생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업성취도가 학생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학생만족,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만족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성호(1996)는 교육방법 탐구의 패러다임에서 학습 요소를 학습목적, 학습내용, 교사, 학생, 학습환경, 학습방법 등 6가지로 구분하고, 황병수(1993)는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교수전략의 결정 요인을 학습목적, 학습내용, 교사, 학생, 학습방법, 학습매체, 학습풍토, 학습기법 등 9가지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의 질의 구성 요소로 기술과 기능, 교육의 양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수업시수와 범교과수, 그리고 매개요인으로 학습풍토와 학업가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교육의 질'의 구성요소

교육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그 질(quality)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원래 질(quality)은 대상이나 관점,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통일된 견해가 없지만, Garvin(1984)은 질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선형적 접근방법, 제품 중심적 접근방법, 사용자 중심적 접근방법, 제조 중심적 접근방법, 가치 중심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교육의 질'은 사용자 중심적 접근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학생의 명시적, 묵시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의 총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질은 Grönroos(1984)의 서비스 구분법에 따라 기술적 질과 기능적 질로 구분하였다. 학교에서 기술적 질은 학생과 교육제공자의 상호 작용의 결과 학생이 얻는 것으로서 'what'이다. 교육내용, 교사의 지도 내용 등이 이에 속한다(채연수, 1999). 기능적 질은 교육이 제공자에 의해 학생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으로써 'how'이다. 교사의 친절성, 예의성, 교사와의 관계,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등이 있다.

교육의 질과 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육의 질은 만족도,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채연수1999, 황인호, 2005),

(2) 교육의 양

학교 교육에서 양적·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은 학생이 일정 기간 배워야 할 수업시수나 범교과목 수 등이다. 특정 교과에 대한 수업시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범교과목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학습 등의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에서 학습량은 만족도, 학업성취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손진희·김안국·신종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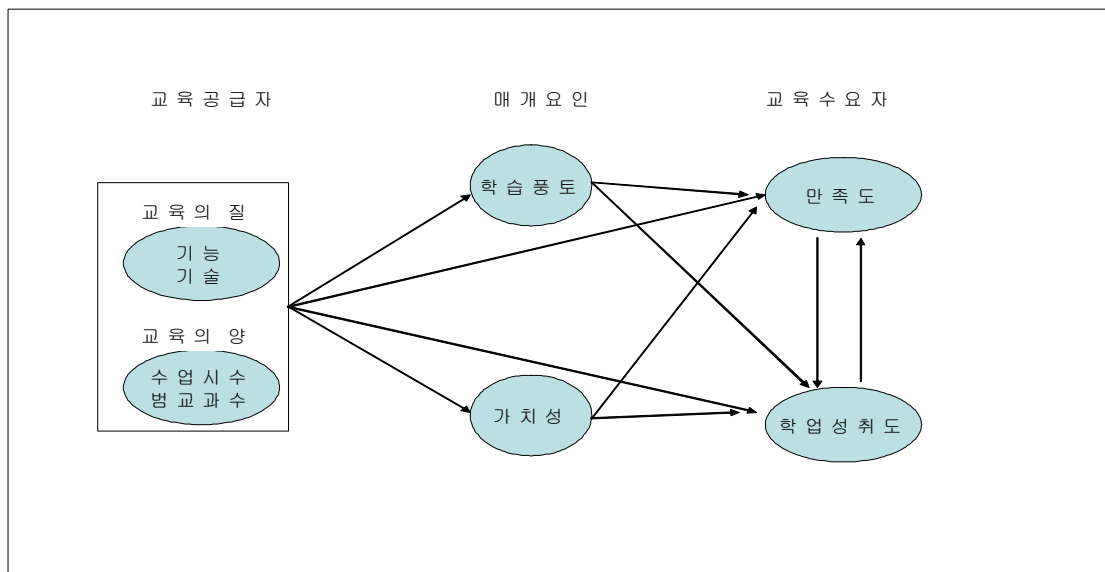
(3) 학습풍토, 학습가치

학교에서 학습풍토는 학교의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분위기는 학교마다 다르고 학급마다 다르다. 이런 학습 풍토의 개념은 사회심리학에서 조직풍토로부터 비롯되었다. 머레이는 조직풍토는 외부의 압력과 자신의 인성적 경향인 필요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 행정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압력과 같은 형태로 규정되기도 한다. 백맨과 세코드는 조직풍토의 요인을 ① 인성적 특질이나 동기, 능력, 가치, 과거경험 ② 준거나 역할기대 및 학교자체의 특징 ③ 학교 내의 비형식적인 조직의 가치와 준거 등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이처럼 학교 학습풍토는 인성적 특성과 학교의 조직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개념으로서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학습풍토가 학생의 학교에 대한 태도, 학생의 성적, 학습목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한은숙, 2003). 한은숙(200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질적 구성요인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습풍토를 매개로 했을 때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학습풍토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습가치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을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평가를 말한다. 교육의 질과 학습가치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교육의 질이 학습가치에 선행하며, 학습가치는 학생만족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인호, 2005),

이 이론을 종합·정리하여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Ⅲ. 학교통일교육의 진단

1. 통일교육의 질은 높은가?

통일교육의 질은 학생만족도와 통일의식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통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아질 것이다. 손기웅(2006)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명칭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22%불과했고, 국정홍보처(2005)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학생 3명 중 1명 정도(34%)만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실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4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학업성취도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통일교육의 전반적인 질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현재의 수업 방식은 강의식 교육(47.1%), 시청각 교육(27.6%), 토론식 교육(12.7%), 현장학습 중심교육(3.4%)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으며, 희망하는 수업방식으로는 현장학습중심(42.7%)이 가장 높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Cyber통일교육센터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1.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응답은 57.1%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통일교육방법에서 통일교육 제공자는 전통적인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수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일교육 시수와 범교과 통일교육은 적절한가?

6차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주로 담당하던 교과는 주로 도덕·윤리교과였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부터는 도덕·윤리, 국어, 일사, 역사, 지리, 예체능 등 범교과에서 가르치고, 교과외 활동인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에서 통일교육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매우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표1>에서 알 수 있듯 통일교육에 대한 도덕·윤리 교과 수업시수는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통일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수업시수는 줄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도 있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표1〉 통일교육과정 수업시수 비교

구분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바른생활 도덕과목 시수	6차 교육과정	60	68	34	34	34	34	68	68	68	34	34	34
	7차 교육과정	60	68	34	34	34	34	68	68	34	34	(심화과정)	
통일 교육 내용의 시수	6차 교육과정	10	15	8	8	8	8	12	12	12	0	0	20
	7차 교육과정	10	15	8	8	8	8	0	12	0	17		

하지만 이런 범교과 통일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연수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범교과적 학교통일교육을 대비한 교과별 통일연수도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요원한 실정이다.

〈표2〉 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비교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민족의 의미 파악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 국가,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삶과 국가> ○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 국가 발전과 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 과제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과 민족공동체윤리>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주민과 민족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공동체 변명과 통일국가의 실현방안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평화와 인류애 > ○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고등학교	전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려는 굳은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변명과 통일 한국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민족의 윤리> ○ 국가와 윤리 ○ 민족과 윤리

통일교육 수업시수가 줄어든 도덕과의 경우, 2007년 고시된 도덕과 교육과정 중 통일관련 내용을 보면 <표 2>과 같다. 7차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중고등학교 각 학년에 통일교육 관련 부문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발전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경우에는 6차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30%정도 축

소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중학교 도덕과를 예로 볼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도덕과에서 통일교육 내용은 이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중·고등학교(8-10학년)의 도덕을 1학년에 2개 영역씩 학습하도록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이 2학년에서만 다루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들은 통일교육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내신 또는 상급학교 입시에 대부분 가치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 2월 22일 발표한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무려 전체 77%이고, 이 중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율도 62%를 넘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신, 입시관련 교과목에 가치성을 그 만큼 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입시와 관련된 교과 및 주제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는다. 통일교육도 이와 같은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학교내신이나 대학입시에서 '통일교육'관련 시험이 출제되느냐 여부에 따라 통일관련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달라진다.

4. 통일교육 학습풍토는 조성되어 있는가?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습풍토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풍토의 변인을 '태도', '통일관심도'로 하여 통일교육 학습풍토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통일교육에 대한 학습풍토는 중고교생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통일연구원(2005)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란 질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는 33.9%,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는 49.9%,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이다"는 45.4%로 대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연구원(2004)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란 질문에는 57.4%학생들이 "관심이 없다."로 대답하였고, 국정홍보처(2005)의 "통일의 방식, 시기, 통일 후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란 질문에 대하여는 중고교생 42.6%가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중고교생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고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학습풍토는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현재 학교통일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이상은 좋으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보다 학생들의 통일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과 진단을 토대로 학교통일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1. 학교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확고한 통일의식을 함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경쟁력 있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교과서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차 교육과정 도덕·윤리 교과서 통일교육 부분의 경우 ① 너무 ‘재미’가 없다. 교과서의 구성이 훈화나 설교조이고 그 내용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식상한 것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든다. 누가 강권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책을 보았을 때, 지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꺼리’가 없다. 특히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도덕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부분 반복되거나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하기도 쉽지 않다. ③ ‘논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혹평이라고 할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교과서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하다보면 논자의 주장은 있으나 그 논거가 너무 빈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고, 문장도 논리적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띈다.

다음은 ‘통일교육방법’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존 학교통일교육은 전지전능(?)한 교사가 무지몽매(?)한 학생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식의 교화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 학생들 스스로 수업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박준수와 추경완 그리고 백장현(2003)이 주장한 구성주의적 접근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오기성(2001c)이 제시한 북한관광 가상 체험 모형 등 17가지 교수-학습 모형도 통일교육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통일교육의 적절한 양을 확보하려면.....

학생 입장에서 볼 때,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통일교육 시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도덕·윤리 교과에서 전담하던 통일 윤리 교육을 범교과, 교과 외 활동으로 영역을 넓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은 매우 낮고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마저도 부족하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 교육은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통일교육 전담교사를 시급히 양성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및 전문성을 고취하거나 또는 통일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존 도덕윤리교과에서 통일교육 시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범교과 통일교육 전담교사를 시급히 양성하려고 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그 바탕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관심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통일교육을 꾸준히 담당해왔던 도덕·윤리 교과교사나 그 이외 교과에서 특별히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일부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양질의 통일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교사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의 '애국적·민족적 사명감(?)'에만 기대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통일교육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교사 유인책을 써야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3. 학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과거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욕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교사 주도의 일방통행식 교육이 시행되어 왔다. 국내외 통일 환경은 급변하고, 통일교육 당사자인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식도 과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제 통일 교육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이 학생 자신에게 가치롭고 유용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만약 내신과 입시에 학생들이 가치성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한 방안은 아닐까?

또한 현장중심학습(체험학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현장중심학습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오기성(2001a)은 교육제공자는 아이들의 생활에 맞추어 학습을 전개하고, 다양한 학습 및 실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되

며, 다양한 학습 및 실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통일 의지를 내면화 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학생들의 주변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생활주변에서 할 수 있는 현장중심학습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가치성을 더욱 높이려면 현장중심교육을 수행평가로 연결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4. 통일교육 학습풍토를 조성하려면.....

교육의 질과 양이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습풍토를 매개로 했을 경우 훨씬 증대된다. 따라서 통일교육 담당자는 학습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상체계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현재 학교차원에서 통일교육은 교사나 학생 모두 일과성 행사에 불과하며 보상체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실정이 이렇다보니 학교에서 대부분 교사들은 매년 6월이면 어김없이 시행하는 통일관련 행사는 그저 귀찮고 흉내만 낼 뿐이다. 현재와 같은 학습 풍토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학교통일교육은 외면 받기 십상이다. 즉, 정부나 교육청, 학교는 강압적인(?) 지시나 일방적인 협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수요자가 되도록 유인하라는 것이다. 수요가 없으면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

V. 결론

이 연구는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 지향적 수요자 중심 교육’입장에서 접근하였다. 복지 지향적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며,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업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이 만족하고 통일의식을 함양하려면 먼저, 통일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통일교육방법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학교통일교육이 범교과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적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 학습 풍토와 통일 교육의 가치성을 중점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 교육청차원, 학교차원에서 통일 교육담당교사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수란(2003).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학술대회논문집.
- 김경호(2005).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동아대학교), 24(2), 1-15.
- 김동근(2005). 제7차 교육과정 중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3(1), 103-120.
- 김명(2003).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충북대학교), 24(3), 1-20.
- 박준수·추병완·백장현(2003).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인문사회교육연구**(춘천교대), 23-42.
- 손기웅(2006).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의 제4차 청년위원회 결과보고**, 6월호, 4.
- 손진희·김안국·신종호(2005).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 385-409.
- 안승대(2006). 통일교육의 변증법적 접근 방향 탐색. **한국교육**, 33(1), 27-52.
- 오기성(2001a).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북한, 10월호. 136-145.
- 오기성(2001b). 학교 통일교육의 신 패러다임 연구. **국민윤리 연구**, 46, 111-129.
- 오기성(2003). **통일교육교수법과 그 실제**. 서울 : 통일교육원.
- 오기성(2005). 학교통일교육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 이경철(2004).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 대학이미지 및 긍정적 행동 의지에 미치는 인과모형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2(4), 287-309.
- 이성호(1996). **계열별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유재(1994). 고객 만족의 결과 변수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경영논집**, 서울대경영연구소, 29(3,4)
- 채연수(1999). **교육서비스 품질의 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통일부 통일교육연구원(2004).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 한은숙(2003). 지방대학교육의 교육만족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1(3).
- 황병수(1993).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황복주·김재열(2002). 대학교육서비스 품질 측정과 학생인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건양대학교), 27, 1-26.
- 황인호(2005). *교육서비스 품질의 측정과 학생 만족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여정(2005).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rvin, D. A(1984), "What Does 'Product Quality' Really Mean?", *Sloan Management Review*, vol.26, pp.25-44.
- Grönroos, Christian(1984) , "Service Quality The Six Criteria of Good Perceived Service Quality", *Review of Business*, 9(winter), pp.10-34.
- Tes, D . K and P. C. Wilton(1988J,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Formation An Extension, "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5 (May) pp.41-47.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윤 건 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장학사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윤건선(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장학사)

I. 토론을 시작하며...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이라는 학교 통일교육 워크숍이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워크숍이라 생각한다. 특히, 점차 낮아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통일교육 담당자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워크숍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통일부 통일교육원 및 워크숍을 준비한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신 김우인 선생님은 다년간 도덕·윤리교육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특히 학교 통일교육에 관해 오랜 기간 연구와 집필을 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를 하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도덕·윤리과 교사들이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을 인정해야 한다. 관련 학술발표회, 회원 연수, 자료 개발 등……. 특히, 지난 수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개발한 자료는 전국 어느 교육청 자료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한다.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도 현실적 감각에 바탕을 둔 훌륭한 자료임을 인정하였다. 자료 개발이 어떤 평가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제작되었음을 알리고 싶다.⁴⁰⁾

40) 199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에 의해 개발된 『주제별 통일교육 자료』는 학교통일교육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시절, 학교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로 보급되어 호평을 받은 자료이다.

두 번째는 2002년 인천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여 개발했던 『통일교육자료집』으로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용 자료로 개발되었으며, 내용 체계는 크게 8개의 영역으로 우리나라 분단 역사 고찰(분단의 현실, 원인, 고착화 과정), 남북 문화 이해(남북한의 언어, 생활문화, 규범 등), 통일의 기본 방향, 분단국가의 통일 교훈,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우리 민족 공동체의 당면과제, 미래 통일 한국의 모습,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 등 방대한 내용으로 무려 470여 쪽의 학습

그러나 이러한 자료 개발 및 교사 연수 등 통일교육의 변화에 대한 시도와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교육 기관에서조차도 통일교육이 강조되지 않아 점차 쇠퇴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형식적이고 매년 치르게 되는 일과성 행사로 전락하여 담당 교사의 사기 저하와 의욕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업무만 증가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발표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적합한 통일교육 방안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II. 현행 통일교육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시 분석

1.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

발표자는 현재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진단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41.1%로 매우 낮은 상태로서 ‘**복지지향적 수요자 중심 교육**’의 입장에서 **학교 통일교육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도덕·윤리과의 통일교육 시수는 줄어든 반면 범교과 통일교육 시수가 증가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습량의 감소는 없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교사의 질적 감소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은 학습량과 학습의 질적 감소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셋째, 학교교육에서 입시와 관련된 교과 및 주제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은 통일교육은 학교 내신이나 대학입시에서 ‘**통일교육**’ 관련 시험이 **출제되느냐 여부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중고생의 절반 가까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이런 풍토에서의 통일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

자료였다. 이 자료의 또 다른 특징은 심화보충 학습 자료로 통일과 관련된 인물학습(연개소문, 나폴레옹),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개념분석 학습 모형, 가치 갈등 학습모형, NIE학습 모형, 집단탐구 학습 모형 등), 토론학습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상기 제시한 4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확고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경쟁력 있는 교과서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교육 전담 교사제 운영을 제시하면서 통일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존 **도덕윤리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시수를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현장중심학습 및 수행평가 적용 등 통일교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강압적인 지시나 일방적인 협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과 교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통일교육 발전 방안

1. 통일교육 대상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

먼저 통일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전제로 발표자가 제시한 통일교육 대상자의 특징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이들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조의 훈화 대신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느낌을 중시하는 뉴에이지 문화에 길들여진 세대이다. 이들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남의 눈치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충실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거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거부하며, 좋아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교육의 결과를 타할 것인가?

결국 통일교육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대상은 우리 교사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층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할 만큼 교육활동에서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사의

노력 없이는 발전적인 통일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수요자가 아닌 교사이다. 그런 면에서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대상자의 변화된 특징에 대해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상자들에 적합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연구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몫인 것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구태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교사는 의욕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으로 이들에게 삶의 의욕과 동기유발을 시키는 물론 학업성취도까지 확보해야 한다.

2.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국정홍보처(2005)의 발표 자료인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41.1%) 결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통일교육의 전반적인 질은 매우 낮다”는 분석에 대해 통일교육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현재의 수업 방식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통일교육 제공자는 전통적인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수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선호와 눈높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일교육 관련 교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단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이나, 학습 자료 개발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요즘 일선 학교 교사의 하루 일상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날 정도로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나 좀 더 나은 학습 자료 개발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무리하게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질적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담당 교사의 의견 수렴과 일부 참여를 바탕으로 통일교육 전문가 집단(통일교육원 연구원, 관련 교과 대학 교사, 각종 연구 단체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를 개발·적용·검토·분석한 다음 일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통일교육 담당 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발표자가 통일교육 관련 범교과 교육 확대로 도덕윤리 교사처럼 통일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한 교사에 비해 “비전공자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는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

또한 발표자가 “이런 범교과 통일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문화 이해 및 통일에 대한 연수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범교과적 학교통일교육에 대비한 교과별 통일연수도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요원한 실정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긍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 교사들의 몫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고위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숙원이다.

솔직히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전공한 도덕윤리교사들 중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풍토 상실, 학생들의 참여 의욕 저하, 학교에서의 관심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공 교사들조차 소극적으로 임하려는 통일교육의 현실에 대해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덕윤리교사들 중 타 교과 부전공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 상당수는 전과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4.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안

지금까지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따른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제부터는 평소 통일교육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자의 입장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교육 상급 기관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확고한 통일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 흔히, 상급 기관에서의 잔바람은 하급기관에서는 태풍으로 느껴질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 최근 정권 교체에 따른 통일교육의 분위기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한다. 상급 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학교 통일교육의 길은 요원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에서 통일교육의 여건 조성 등에 큰 관심이 없으면서도 실적 제출 등 성과 지향적 교육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교육여건 보장 후 실적 요구의 순서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교육다운 교육도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셋째, 교육 기관에서의 제도적 시스템 개선 문제이다. 학교에서 통일교육 관련 행사 시 연간 활용 시간 등을 정하여 지침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봉사활동, 교내 행사 활동 시간 수 지정과 같이) 또한 학교 행사에 포함하여 범교과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에 의해 결정되듯이 통일교육 담당 교사의 열정이 있다면 학교 통일교육이 지금처럼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교수-학습 개발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개정 의견 제시 등 학회나, 연구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⁴¹⁾

다섯째, 행정 기관(교과부, 통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관심 제고를 위해 ‘연구·시범학교’ 선정 시 반드시 매년 1~2교에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실질적인 연구·시범 운영을 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에서는 가능한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통일교실(과학실, 외국어실, 미술실, 음악실 등과 같이)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본 워크숍이나 각종 세미나, 발표회 등에서 제시된 통일교육 방안에 대해 담당 교사는 반드시 한두 가지의 이론이나 주장을 실험 적용해 보아야 한다. 워크숍에서 제시된 새로운 안에 관한 자료를 책장에 묵혀서는 안 된다. 최소한 하나라도 적용해 보려는 의욕을 가질 필요가 있다. 투입 후 성과가 있다거나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동 교과 교사와 협의하여 발전시키고, 이를 인근학교나 교과연구회 등을 통해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여덟째,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연구회나 통일관련 연구 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각종 연구단체 지원으로 인해 통일교육연구회 등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범교과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야 하며 각종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홉째, 통일교육 관련 청소년 토론 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회 후원 및 민주시민 교육연구회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수년전까지 행해졌던 ‘고교생 민주시민 의식 함양’ 행사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역기능을 해소 정비하여 부활시킴으로써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1) 예를 들어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개정에 관한 설문 조사 시 대다수의 교사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무관심하여 의견 제시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극히 일부 교사들만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개정안 발표 후 뒤늦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교사가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우리 전공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할 사항이다.

열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일선 학교 학교장의 의식 변화를 요구한다. 각종 크고 작은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해 교육력 제고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확고한 통일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직원 회의, 학생 조회, 조·종례 시간 활용, 학교·학급 게시판 및 홈페이지 활용, 가정통신문, 각종 행사 시 강조한다면 담당 교사의 의욕 제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IV. 발표자에 대한 질의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일교육 전반에 대해 특히 ‘수요자 중심 교육’입장에서 발표를 해 주신 김우인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2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다.

첫째는 통일교육 담당 교사나 비전공 교사(범교과 교육 활동 담당교사)의 통일교육 관련 연수를 어떻게 실시했으면 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발표자가 제시한 “국가차원, 교육청차원, 학교차원에서 통일 교육담당교사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V. 토론을 마치며...

발표자가 통일교육을 공급자 입장에서 접근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통일교육을 ‘수요자 중심 교육’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삼고 이들의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진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앞으로 그 변화 추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앞으로 학교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이러한 워크숍의 기회를 더욱 확대 실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마치고자 한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탐색

최 일
인천마곡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탐색

최일(인천마곡초등학교 교사)

- I. 들어가며
- II. 문제점 하나 - 교육주체
- III. 문제점 둘 - 교육과정
- IV. 개선방향 하나 - 교육주체
- V. 개선방향 둘 - 교육과정
- VI. 나오며

I. 들어가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수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즉, 통일수업시수의 부족,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저하,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의 부족, 통일관련 자료의 미비, 교육주체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해, 학교통일교육은 소수의 교사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통일교육주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과정의 문제이다. 통일교육의 주체는 국가, 학교관리자, 학부모, 교사, 학생, 매스컴으로 분류하여, 통일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나누어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문제점 하나 - 교육주체

1. 국가

국가는 통일교육 목표에 일관되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여 통일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야기시킨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화해·협력을 중심으로 한 평화번영정책이고,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상생·공영정책이다. 이 두 정권의 정책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한다. 전 정부는 꾀꾀 얼어있는 북한을 따듯

하게 달래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하여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자는 정책으로 북한을 미래의 파트너로 보는 비중이 크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전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적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한 바탕 위에 북한과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방법을 찾는 쪽에 비중을 둔다.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거나 혼선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또 통일부에서 제공되는 통일교육 지침서(학교용)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길잡이 수준이다. 통일교육의 정의, 통일교육의 목표,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부록으로 된 통일교육 지침서는 구성이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침서를 숙지하여 통일수업의 지침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교사는 어느 정도일까? 아니면 이 지침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본 교사는 어느 정도일까? 아니면 통일교육 지침서의 존재 여부를 아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결말을 가정한다면, 통일교육 지침을 따르지 않은 통일 수업에 대한 제재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북한과 통일 관련 ‘뜨거운 감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뚜렷한 지침과 시원한 설명, 반대 의견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 제시가 없거나 일부에게만 전달되거나 아주 느리다. 학교 현장 일선 교사들은 북한이나 통일관련 현안문제에 대해서 통일수업 시간에 언급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통일교육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언급하더라도 각 교사의 통일관이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2. 학교 관리자

많은 학교 관리자는 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통일교육에 대한 의의를 인정하여 지지하는 소수의 학교관리자도 있다. 그러나 6.25전쟁의 참사를 경험한 관리자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미 존재하며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하면, 북한을 고무, 찬양하여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 결국, 통일교육은 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리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통일교육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지 않는다.

3. 학부모

대개의 학부모들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에는 ‘통일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입시 시험에 통일과 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부모도 같은 생각이다.

또 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다. 학교현장에서 통일수업이 이루어지면, 담임선생님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상적 색깔이 있는 교사이고, 학생들이 ‘사상적 물이 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4. 교사

통일교육의 큰 문제점은 교사의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통일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통일수업을 위한 교재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다.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어떤 수업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더 좋은 내용과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생님들끼리도 공유하는 경우가 적다.

또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교사는 ‘통일은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실을 들추어 보면 그것은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을 찬성하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교사도 상당수이다. 즉, 통일조국에 대한 미래상을 확신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남남갈등이 심한 현 상태에서 통일이 되어 북한 동포까지 합세하면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될 거라는 우려와 제로섬의 계산방식으로 따진 기회의 부족 현상 초래, 또 통일비용에 대한 추가 세금 징수를 원치 않는 교사가 많다. 그러니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열의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두려움도 통일교육의 큰 문제점이다. 북한과 통일 관련한 시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통일수업에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그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다.’ 라고 말하면 억지일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의 대처방안이다.

한 예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는 이익일까? 해가 될까?

상기 질문은 정치학자 사이에서도 한 때 뜨거운 감자였던 화제이다. 즉, ‘핵무기가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우리의 안전을 불모로 잡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하고 그래야만 북한과의 협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반면 핵무기의 대단한 파괴력은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까지도 함께 파멸할 수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징적인 군사무기이므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조국의 군사력 증강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문제를 통일수업에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의 우선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혹시 말실수를 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라는 점이 진실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전달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다. 그래서 결국 통일교육을 할 때 현안문제를 회피하여 통일관련 교과 지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가르친다.

5. 학생

학생들도 통일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다. ‘통일이 되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다.’ 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침체, 사회적 혼란, 민족끼리의 갈등심화, 치안 불안정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유가 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현재의 남남갈등을 통해서 본 합의과정의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기회의 부족현상 초래, 늘어나는 세금 징수라는 우려가 만들어낸 부산물이기도 하다. 이는 독일의 흡수 통일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학생들은 민족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선뜻 북한 동포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같은 민족이기를 꺼려하며 현재의 불안한 분단 상황을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만을 바란다. 이는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아닌, 편견과 선입견이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해 교육은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라는 대립적 구도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의 단점과 모순을 부각시켜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이 너무 강조되어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북한 주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가 민족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나타난 것이다. 즉, 북한과 북한 주민을 분류하여, 우리와 다른 북한주민의 사상과 문화를 다문화교육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6. 매스컴

매스컴은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산발적이다. 학생들의 북한과 통일 관련 지식 습득의 가장 영향력 있는 통로는 매스컴이다. 이는 시청각 매체라는 교육적 효과성과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성이란 장점을 매스컴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방송국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은 서로 경쟁적하여 방송국 간의 연계성이 부족

하다.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방송되는 경우가 많다. 또 같은 사건에 대한 논평이 다를 경우 진위 파악이 어려운 학생 시청자들에게는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 교육적인 목표와 동떨어지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매스컴과 교육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북한 관련 사건 보도는 시청자가 학생일 경우 적절한 교육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미국대사관에 자유를 찾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난입하는 장면을 매스컴이 보도할 때는, 시청자인 학생들이 보기에 탈북자들의 난입 장면이 보다 생생하고 실감나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시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처절하다라든지 비참하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Ⅲ. 문제점 들 - 교육과정

1. 목표

통일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 받으면서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뽐내며 안전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남북한의 불안한 분단 상황인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미래에 함께 살아갈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이기도 하다. 이런 북한의 이중성 때문에 정권교체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북한을 파트너쪽으로 더 생각하느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 쪽으로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노무현정부나 이명박정부나 북한에 대한 인류애적 원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우선으로 한 전 정부에서의 북한 원조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높았으나, 튼튼한 안보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에서의 북한 원조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것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인식이 달라 통일수업의 출발점 조정이 불가피하다.

2. 내용(체계)

통일부는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 각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내용체계 면(5항 16목)에서는

잘 구성되어 있으나 통일관련 교과인 도덕과의 지도요소와 비교하여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통일교육 지침서의 초등학교 권고사항에 보면,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습과정에 적합하게-상황중심(또는 생활중심),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도덕시간은 1주에 1시간씩, 1년에 34시간이 배당되었고, 그중에 통일관련 시수는 1년에 3시간이다. 1년에 3시간동안 통일에 관해서 공부하고 다시 1년이 지난 뒤에 3시간 공부한다. 그것도 내용체계에 따른 지도요소 모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일부분을 공부하는 것이어서 통일교육의 효과는 보장받지 못한다. 실제로 초등학교 도덕교과(바른생활) 6차, 7차, 개정교육과정 중 통일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바른 생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애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 가지기 ·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 바르게 달기 ·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에 긍지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 해외 동포들의 생활에 관심 가지기 ·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 사랑하기 ·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소중히 하기 ◦ 통일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극복의 의지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하기 ·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기 ·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문화 유산 애호 ·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 평화 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 가지기 · 다가올 통일에 대비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 극복과 관용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 평화로운 세상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평화교육 요소가 이전 교육과정보다 많이 포함된 점과 통일교육 출발점에서 북한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내용과 북한이해 교육 차원에서 북한 동포와 새터민의 삶을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의심스럽다.

3. 방법

대표적인 통일수업 방식은 편한 강의식 수업이다. 강의식 통일수업은 대부분 교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하여 선생님이 설명하고,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가장 간단한 수업방식이면서 매우 익숙한 수업방식이기도 하다. 문제는 통일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강의식 수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교수 전략이 대단히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통일수업에 무관심하거나 재미없게 느끼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업방법이 내용 없는 토론 수업이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문제(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제로 교사 대 학생, 학생 대 학생의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무척이나 적극적이고 진지한 수업이 진행될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선 교사가 토론 결말을 어떻게 맺어야 할 지의 국가적 차원의 지침이 없어 교사 개인의 정치 성향에 의존하게 되거나 토론의 결말을 회피하게 된다. 또 토론의 근거로 제시할 뜨거운 자료를 찾기 매우 어려우며, 다양한 측면의 근거를 찾을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학생들도 마스크를 통해서 들은 산발적인 자료를 현학적으로 제시하거나, 감정적인 토론을 하기가 일수다.

상품타기 위한 퀴즈 맞추기 수업도 통일수업방법으로 많이 쓰인다. 속칭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라는 퀴즈 맞추기 통일수업은 재미있고 신나는 수업방법처럼 보인다. 더욱 큰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상품을 제시한다. 그 순간 통일수업의 목표-예로 북한 친구의 학교생활 알기를 통한 남북한 학생의 동질성 회복은 사라지고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시 된다. 물론 호기심을 빙자한 운의 효과가 승패를 좌우한다. 사전에 공부한 내용도, 공부할 시간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이다. 상품을 탄 학생도, 운이 없어 일찍 탈락한 학생도 퀴즈 맞추기 수업이 끝나면 북한과 통일관련 내용이 기억에 거의 남지 않으며 그 차시 통일수업의 목표인 남북한 학생의 동질성 회복은 소원해진다.

관광차원의 통일관련 현장학습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이다. 현장 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과정이 없으면 단순한 관광이 되기 쉽다. 통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임진각 등은 통일관련 현장 학습의 좋은 장소이지만, 촉박한 견학시간에 쫓겨 차안에서 과자를 먹으며 버스차창 밖으로 보는 현장체험학습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4. 평가

통일교육의 평가는 주로 지필평가로 이루어지며, 단순한 통일관련 지식 암기 수준을 판별한다. 그것은 통일수업 시수도 부족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IV. 개선방향 하나 - 교육주체

국가는 통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의 제1과제가 남북한 통일이 라고 천명하면, 통일교육은 활성화된다.

국가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변함없는 통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국제 정세와 북한의 변화에 따라 주도적으로 북한과 주변국과의 외교를 하더라도, 통일된 조국의 미래에서 우리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 그 어느 누구와도 더불어 살면서도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한 교육, 즉 통일교육의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즉 북한에 대한 외교와 평화롭게 통일된 조국에서 북한 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을 분류하여 국가정책을 펴야한다.

또 통일교육에 대한 지침이 아닌 통일 교과서를 제작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일 교육과정과 학교통일교육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까지도 제공해야 한다. 물론 통일교과서 제작은 통일수업시수의 넉넉한 확보를 보장한다.

북한과 통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국가적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반대 입장을 설득할 만한 자료를 학교현장에 탄력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관리자는 본인의 성향과 정치적 관점과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학부모도 대학입시 중심으로 모든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 자유와 인권을 서로 존중하며, 많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보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지 말고 통일교육의 의의를 알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교사도 국가가 제시한 뚜렷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통일수업을 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법적 테두리 제공은 통일교과서(국정교과서이든, 인정교과서이든)가 될 수 있으며, 현안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반대 입장을 설득할 자료도 가능하며,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통일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통일학교에서 실질적인 통일수업을 참관하여 배운 통일수업 교수방법도 법적 테두리가 될 수 있다. 또 교사는 많은 통일관련 연수를 적극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통일의 필요성과 의의를 교사부터 스스로 내면화하여 내실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열의를 가지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피교육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학습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즉, 10년 후 자신의 사회생활을 미리 짐작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방법, 특히 자유와 인권, 능력신장과 재능발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준비할 것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통일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매스컴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교육의 주체임을 명심하여, 하나의 통일관련 보도가 교육적 가치가 있도록 방송국 상호간에, 교육부, 통일부와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체류 탈북자들의 미국대사관 진입 장면을 매스컴에서 보도할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유’이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한 행동은 숭고한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은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도록 교육부, 통일부와 매스컴이 연계하여 방송한다.

V. 개선방향 둘 -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점은 우선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시수 확보이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과 방법이 있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시수 확보는 현재로서는 통일교과서 제작이 최선책이고, 학교재량시간 2시간 중에 통일교육을 1시간 책정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통일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모든 교과에서 통일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통일교육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흥내만 내면 안된다.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모두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개인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내용면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용이 되도록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법면에서도 앞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즉, 이론적 설명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수업은 다양한 방법-천마,악마 토론놀이, 모서리토론, 신호등 토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며 주장의 근거가 될만한 내용을 학급게시판에 게시한다거나 수업사전에 과제로 제시하여 준비하면 내실있는 토론 수업이 진행된다. 퀴즈풀기 수업도 공부할 시간을 주고 실시하고 다양한 놀이학습, 사이버통일교실을 활용한 문제풀이 수업이 병행 가능하며, 현장체험학습도 사전에 견학지에 대한 조사와 견학 의의를 미리 학습하고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많다. 이는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주체들이 서로 도와서 효과 있는 통일 수업 방법을 만들고 공유해야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

평가면에서도 학생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재미를 느껴서 통일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내면화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관련 인터넷 공청회에 참여 횟수 평가,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 정도(?) 등을 관찰평가하거나 상호 평가해야 한다.

VI. 나오며

학교 현장에서 이런 통일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국가도, 학교관리자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매스컴도 대한민국의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알아 통일하려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간다.

학교현장에서는 통일수업이 모든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익힌다. 그리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조국에 많음을 확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알고 실천한다. 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생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아 누구와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형성되어 가는 학교 통일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2007)
-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진단과 개선방향』 (2008)
-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2007)
- 오기성,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기준 검토 결과』 (2007)
- 이규봉, “청년·청소년층의 통일의식 확산과 실천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7 제 9차 청년위원회 자료집』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통일교육 지침서(2006)』 (2006)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통일교육 지침서(학교용)』 (2008)
- 황인수, “화해 협력시대의 통일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20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차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자료』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탐색

이 동 준
인천발산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탐색”에 대한 토론문

이동준(인천발산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먼저 초등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하여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탐색”이란 주제로 발표하여 주신 인천마곡초등학교 최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지식과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주제발표자의 원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토론에 참가함으로써 발표자의 본 뜻에 어긋난 내용과 어설픈 이야기로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6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하나 되지 못하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다. 과거 한국 현대사의 슬픈 질곡의 세월동안 전 사회적으로 통일을 강력히 염원하였고, 특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게 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개인들이 나름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통일의 여건이나 역량은 성숙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젊은 세대나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통일 무용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통일의 주역이자 통일국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그다지 곱지 못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의 가능성이나 당위성 자체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아닌지 오래 되었다. 오히려 통일교육은 학생들 사이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교사들도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로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기피하는 정치적 피해의식이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의 적극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학교통일교육워크숍”은 향후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의의 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자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제발표자의 초등학교 통일교육 개선 방

향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느꼈던 평소 생각을 첨언하는 형식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2. 교육주체로 본 초등학교 통일교육

발표자께서 제시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제시한 국가, 학생, 학부모, 교사 속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고자 한다.

○ 통일교육의 학문적 접근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통일교육은 다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국가는 통일교육 목표에 일관되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여 통일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거나 혼선을 빚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에 최일 선생님은 국가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통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통일 교과서를 제작하고 통일수업시수의 확보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적용되는 제7차교육과정은 이미 10년전의 교육과정이고 그 사이 남북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정치적 정책변화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임시응변식의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⁴²⁾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현장에서 통일관의 잦은 변경은 교사가 통일교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북한과 통일에 관한 학문적 탐구방법의 바른 모형을 찾고 학문적 탐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 통일에 관해서 선입관과 편견이 없이 탐구하고 접근할 때 합리적인 통일방안과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학부모와 학생은 모두 통일교육의 대상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에서 ‘대학입시 과목이 아닌 통일교육이 필요하지 않다.’와 ‘통일교육은 사상적 색깔이 있는 교사가 실시하는 것이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은 학부모의 생각이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데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손기웅의 “학교통일교

42) 박문갑,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제3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006. 6), p.34.

육 현황과 개선방안”⁴³⁾ 연구 결과를 보면 북한의 공식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 22%에 불과하며 통일비용 충당을 위한 세금징수에 부담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9.2%라고 나타난다. 이것은 학부모의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무관심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학부모들은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며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지해 주어야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시험과목이 아닌 통일교육이 현실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이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를 의미하는 완전한 통합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을 인지해야 하며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야기하는 교육이 아닌 이념적 갈등과 혼란을 조정해나갈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학생들 또한 무조건적인 피교육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학습하려는 자세와 미래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갖고 있는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을 인정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환경조성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통일교육에 대한 열의와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성향(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교육으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라는 점은 교사인 본 토론자에게도 느끼게 하는 바가 많다. 북한학이나 정치학, 또는 통일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일관련 전문가는 많을 수 있지만,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북한에 관해서,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전문가층은 아쉽게도 적다. 지금도 언론에서 북핵관련 대북관련 기사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에게 “통일교육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가 미디어와 온라인상에 제공되어 있는데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교사는 위에 제시한 두 가지 문제와 함께 통일교육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전문가로 양성되어야 할 교사들이 받는 통일교육 연수 현황을 보면 2006년 6월까지 초·중등 통일교육 직무연수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기관은 서울특

43) 손기웅,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차 청년위원회 결과보고 (2006. 6), p.4.

별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5월까지 통일교육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교육연수원은 없는 실정이다.⁴⁴⁾이 같은 문제는 통일교육이 통일부에서 주도해야 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도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서로 역할분담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연수로는 참여도를 높일 수도 없으며, 교육현장(학교)의 실태가 무시된 연수 또한 긍정적인 연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통일부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과 통일자료의 개발 및 보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은 이미 갖추고 있는 연수에 관한 인프라를 통한 연수의 장을 마련한다면 통일에 대한 교사의 고민이 늘어날 것이고 학교 통일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 전문성 연수는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능동적인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3. 교육과정에서 본 초등학교 통일교육

발표자께서 제시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중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통일교육 시수, 통일교육 방법, 통일교육 평가 속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고자 한다.

○ 통일교육 시수 확보를 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지는 가장 많은 것이 학기말에 편성된 1년에 3시간(도덕과)이라는 시수의 부족이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상에서 통일교육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시수 확보 방안에는 통일교과서 제작을 통한 교과로서의 시수 확보, 학교재량시간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시수 확보, 범교과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시수 확보방안을 일반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통일교육을 가장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물론 교과로서 시수 확보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월2회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는 기존 교과, 재량시간 및 특별활동 시간에서 34시간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현실로 볼 때 새로운 교과적 의미의 통일교육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의 요구, 학생의 요구에 따른 재량활동 시간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통일교육을 재량활동 시

44)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장학사대상 연수 (2008. 5), p.7.

간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34시간 모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교과에서 통일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교과통합 및 주제별 구성에 따른 통일교육은 현재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제7차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기반으로 교과통합과 학교장과 교사에게 재량활동 영역 설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6개 학년을 지도한다는 점과 다양한 교과를 지도해야 한다는 초등학교의 특성은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갖고 범교과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범교과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함께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연구되어진 범교과화 관련 자료를 정선하여 교육과정 편성 이전에 제공해 주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통일교육 시수 확보 방안으로는 국경일, 기념일과 명절 및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계기교육과 연계된 통일교육 방안이다. 국경일과 기념일, 명절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날들이다.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우리의 현실 또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서로 연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대국경일은 물론이고 한글날 등의 기념일과 추석 등의 명절을 통일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자료가 개발 보급된다면 각 시기별로 실시되는 계기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시간 부족이라는 통일교육의 문제와 시기별로 편중된(6월과 학기말) 통일교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통일교육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과, 적절한 토론 주제가 제시되지 않고 실시되는 감정적이거나 정답위주의 토론수업, 그리고 단순한 유희를 위한 도구화 된 게임식 통일교육 방법들이 통일교육 발전을 전제하는 수업 형태들이다. 통일교육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의 제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위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평화교육이 발전시킨 다양한 방법론을 흡수한다면, 통일교육은 훨씬 손쉽게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사회적 표용과 배려, 남북한 사이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⁴⁵⁾ 그런 의미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사는가를 의식화시

45) 통일부, 『2007 통일교육지침서』 (2007), pp.9-10.

키는 교육에서 출발하고 존재하는 갈등 관계를 공격성이나, 배타성, 폭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평화교육은 통일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평화교육이 강조하는 교육방식은 지식에 기반을 둔 교육을 넘어선, 신뢰에 기반을 둔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여 관용과 공존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훈련을 그 중심내용으로 삼고 있어 우리를 넘어선 모든 이웃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인식을 넓혀주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나와 떨어진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친구, 나와 이웃이라는 내가 현실적으로 접하고 있는 생활중심 영역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통일 사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통일시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교육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교육의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직접 관찰이 어려워 평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종합생활기록부에 50년간 기록되는 수행평가의 경우 자칫 학부모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필평가와 지식 암기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다형 위주의 평가는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 또는 행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성적이 높은 학생이 관련된 항목에 낮은 행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평가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객관주의적 평가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저해하는 평가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발표자의 의견처럼 통일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내면화되어 행동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주장은 통일교육 평가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체험중심 통일교육을 위한 평가를 강조하여 평가기준을 ‘통일관련 인터넷 공청회에 참여 횟수 평가’와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 활동에 동참 정도’ 등은 수치화를 통한 결과중심의 수행평가로 실시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행 평가의 적용 시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과제를 정하고 학생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탐구 학습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행 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및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먼저 요구되어진다.

4. 나오며

통일교육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문득 독일 통일 후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문제를 보면서 “한국은 지금 차분히 통일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행복한 민족이다.”라고 술회한 ‘한스-자이델 재단’의 게벨트 박사의 말이 생각났다. 우리는 과연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학교현장은 통일에 대해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통일문제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각급 교육기관은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통일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통일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 통일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통일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과 통일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질 때 학교 통일교육은 변할 것이며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학생들이 통일의식을 일깨우고, 객관적 판단능력을 신장시켜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갈 수 있는 실천의지와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전화 : 02-901-7161 ~ 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uniedu.go.kr>

인쇄 : 맑은인쇄 02-2265-7896

